

(2025. 12. 11)

연금연구회 10차 세미나 보도자료

<2025년 12월 11일 오후 2시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연구회는

연금연구회 상임고문(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연금연구회 리더(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2025년 12월 11일 오후 2시부터 동국대 D Square 홀에서
10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자금 안 부족한 국민연금 이자내는 외화채 발행해야만 하나!!!!"를 주제로 한 세미나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문의처: 연금연구회 사무국장단

- (사무국 1국장) 김학주 동국대 교수(010-2788-9973)
- (사무국 2국장)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010-3616-4895)
- (사무국 3국장) 박명호 홍익대 교수(010-9316-9751)
- (사무국 4국장) 김상철 한세대 교수(010-4524-6557)

<발표자 보도자료>

1. 현정환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최근 환율흐름과 정부 정책대응에 대한 평가:

국민연금 정책수단화를 중심으로 -

최근 원화의 급락(고환율)에 대응하여 외환당국이 내놓은 ① 국민연금을 이용한 환헤지, ② 한국은행-국민연금 간 외환스왑 실시, ③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 등의 방안은 국민연금을 외환정책의 수단으로 상설화하는 조치이다.

국민연금은 연금가입자의 자산이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조화하여 기금이 운용되어야 하지,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여 운용되는 건 국민연금 존재의 목적과 존재이유와 합치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을 외환정책수단화하면 수익성과 안정성이 동반 훼손될 것이며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앞당길 것이다. 외환당국은 단기적 시야에서 정책을 수립하지 말고, 장기적 안목에서 ① 외평채기금 확대, 유로달러시장에서 해외투자를 전담하는 국부펀드 육성, ②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시키는 기업환경 조성 등을 방향을 외환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토론자 보도 자료>

1. 김경훈 교수 (홍익대 경제학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환헤지는 환율 변동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요인임.

- 정부는 최근 환율 수준과 변동성 여건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을 간접적으로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 수단으로 검토
- 외화채는 자연헤지 효과를 제공할 수 있으나, 글로벌 금리 환경과 발행 조건에 따라 수익률 측면의 부담도 병존
- 외화채의 정책적 해석 여부에 따라 기금의 운용 독립성과 대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음.
- 외화채는 기존 외환시장 안정 전략을 보완하는 하나의 옵션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 수익성·건전성·정책 효과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필요

2. 김민정 청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국회 미래연구원 전 청년미래위원)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은 기금 운용의 핵심 원칙을 위배하며, 제도 전반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조치다. 국민연금은 조세가 아닌, 국민이 노후를 대비해 적립한 보험료 기반의 기금이며, 그 어떤 정책적 필요보다 우선하여 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의 자산이다.

그럼에도 환율 안정이라는 단기 거시경제 대응을 목적으로 연금기금을 활용한다면 ‘운용 독립성’은 훼손되고, 확정된 이자비용과 통제 불가능한 금융 변동성을 감수하는 구조는 ‘수익성’과 ‘안정성’ 원칙을 침식시킨다.

특히 청년 세대의 연금 신뢰도가 이미 낮은 상황에서 외화채 발행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또다른 신뢰 붕괴 촉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세대 간 합의에 기반한 노후보장 제도임을 분명히 하고, 본연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는 기금 운용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3.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장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

“환율안정 수단으로서의 국민연금, 정당한가?”

최근 정부가 고환율 대응을 위해 국민연금을 환율안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환헤지 확대,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왑,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을뿐더러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연금의 외환정책 수단화가 정당한지의 문제: 환율안정을 위해 환헤지를 확대하거나 사실상 외환시장 개입에 준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기금의 독립성이 약화될 뿐 아니라 수익률 저하 가능성도 커진다. 특히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하락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활용이 지속 가능성을 더욱 크게 훼손할 수 있다.

2. 한국은행-국민연금 외환스왑 확대가 안정 효과보다 위험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의 문제: 스왑 규모가 확대되고 만기가 길어질수록 외환보유액의 유동성이 저하되며, 중앙은행이 연기금과 상설적 스왑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외환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

3. 이자성 자금(보험료)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외화채를 발행해 금리·환율 위험을 떠안는 것이 효율적인지의 문제: 국민연금의 기본적 자금조달 구조는 보험료라는 무이자성 자기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외화채를 발행해 시장금리를 지급하는 순간 구조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 동시에 외화채 발행은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비용 위험과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위험에 동시에 노출되는 구조를 만들며, 환율안정 목적으로 조달한 외화를 매도하는 경우 잠재적 손실 위험은 더욱 확대된다.

4. 민동환 (서강대 경제과 대학원생)

○ 민동환 청년은 "정부가 국민연금으로 외화채 발행을 추진하여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힌 것은 환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연

금의 재정까지 악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며 "정치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폭등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을 일시적인 방패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 행위"라고 주장했다.

○ 민동환 청년은 "한국은 M2(광의통화) 증가율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지나치게 높은 편이며, 이로 인해 원화의 가치와 신뢰는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난 연금개혁으로 신뢰를 잃고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은 물론이고 국민은 부총리의 발언이 현실성이 결여된 발언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 민동환 청년은 "국민연금 기금이 외화채 발행 등의 방법으로 환율 안정에 투입된다면, 이자 리스크, 환 리스크 등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기금수익률 저하로 인해 현재 2064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앞당겨지고,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미적립부채는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을 환율 안정 투입은 단기적인 환율 안정을 위하여 지금의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폭시키는 행위이며,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도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 민동환 청년은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투입하기 이전에 지속가능성이 결여되어 청년들의 미래를 옥죄는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먼저 논의할 때"라고 했다. 이어, 연금특위 상황을 언급하며 "미적립부채를 어떻게든 부정하려는 일부 자칭 전문가들을 태도는,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국민연금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채를 전가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오히려 자신들이 더 많은 연금을 수급하고자 더 큰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5.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

국민연금기금이 1400조여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책 당국의 니드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시 정책 수단으로서의 외화채 발행 추진은 그 어떤 맥락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보임.

-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부채를 줄이겠다는 의지 표명 필요**

※ ‘빛진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의 국민에 대한 읍소가 필요한 시점임.

- 다년간 예산 체계 도입을 통한 재정준칙 도입 시급
- 2025년 11월 IMF 한국보고서 권고처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의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구조개혁을 서둘러야만, 원달러 약세 추이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한 외화채 발행 시도가 아닌, **떠나는 국내와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재정, 통화정책을 시급히 변경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짐.**